

與, 위기관리 시스템 '적신호'

쇠고기 민심악화에 능장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자성 목소리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들끓는 민심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정운영의 양측인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를 돌파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정부 여당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방기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등 '능장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높다. 위기 국면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내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쇠고기 대책 '능장 대응' = 무엇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민심이 악화된 것은 정부의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지난해 10월 참여정부 때 결렬됐던 한미 쇠고기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사전·사후에 대국민 설득작업을 병행해야

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방기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보여줬다.

더욱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이 타결되면서 아권으로부터 '조공외교' '퍼주기 협상'이란 공세의 빌미를 자초했으면서도 정부는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아권의 정치공세로만 치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는 광우병 등 안전 문제에 있었는데도 정부가 풀어놓은 보따리는 축산농가 피해대책이 고작이었다.

◇'쇠고기 민심' 무대책 = 쇠고기 수입 재개를 놓고 인터넷에서 광우병 우려가 '과담'으로 번질되고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권의 인식은 아직도 과거지향적인 강경 대응에 집착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둘러싼 촛불집회에 이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이른바 '광우병 과담'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다. ◇당정간 '엇박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2차례나 당정회의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불협화음만 드러낸 것도 국민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광우병 발생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측이 오히려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선을 빚었다.

◇국정시스템 재구축 제기 = 여권 내에서는 비판 여론에 불착한 수입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원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우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쇠고기 사태를 계기로 여권내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공천 의혹' 서청원 대표 검찰 출두

공천 대가성·추징금 자금 출처 등 추궁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7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두해 "검찰 수사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 친박연대와 서청원을 죽이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고사시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양정재·김노식 당선자 등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공천하게 된 경위와 후보자

들이 당에 특별담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과 공천의 관련성, 본인의 추징금 납부 자금 출처 등을 묻고 있다.

또, 양 당선자와 김 당선자가 각각 17억원, 14억원씩 친박연대 공식계좌로 낸 돈 이외에 개인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또 다른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친박연대가 서 대표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광고기획사와 홍보물 인쇄업체에 홍보 대행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계약액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일단 서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 대표와 동행한 홍사덕 친박연대 비상대책위원장, 엄호성 법률지원단장 등은 검찰 기자실에 둘러 이번 의혹을 둘러싼 서 대표의 입장 등을 전했다.

홍 위원장은 "서 대표는 최근 낸 추징금 2억원 중 5천만원은 본인이 지역구 출마를 위해 비축했던 돈이고 나머지는 친구들한테 빌린 돈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국제청 조사가 들어온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별난 민심에 답답하기만한 대통령

野, 美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총공세 지지율 20%대로 급락 최대의 위기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7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면서 집권 초기부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에서 협상 타결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한 데 이어 8일 오전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쇠고기 수입 개방,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정은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결의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국내고시 연기를 촉구하고 15일 이전 쇠고기 재협상 촉구 국회결의안 채택 방침을 확인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순하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난제를 일개 농업통상정책관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별 게이트를 만나며 나 몰라라 하니 분통이 터진다"며 "이번 쇠고기 협상의 근본 원인은 이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정상회담 전날 황급히 마무리 지은 데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만든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며 "부시 대통령이 가까워지고 친해졌다고 하니 전화라도 해서 '우리 국민을 달래줘야 하니 재협상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통계학에서 '국정운영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지지율 30%마저 무너졌다.

7일 한나라당 공식 여론조사기관인 여의

도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달 30일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급락하면서 28.5%에 그쳤다.

이처럼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사상 유례 없는 일로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광우병 공포가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을 항의하는 촛불 집회에는 중·고등학생들까지 참석하고 있으며 미디어아름 '아고라'의 대통령 탄핵 청원은 6일 현재 125만명을 넘어섰다.

또 국민의 절대 다수가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재협상이나 합의문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더욱이 당정협의도 엇박자 일수인데다 박근혜 전 대표가 쇠고기 협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로 강공을 이어갈 태세여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시련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지역 정가, 美 쇠고기 수입 반발 확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의회는 8일 의회 의정실에서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북구의회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망국적 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해 버린 매국적 행위"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광우병 쇠고기 협상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북구 주민들과 함께 쇠고기 협상 무효화 운동을 강력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쇠고기협상 무효화선언 광주시민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성군의회도 지난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가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뼈 있는 살고기 수입개방을 허용한 것은 축산농가의 재규를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책없는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도 지난달 30일 제23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협상 전면 백지화와 함께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창조한국당 문 대표 검찰 소환 불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구속) 당선자의 공천과 관련해 수원지검 공안부의 소환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검찰로부터 문 대표와 조모 비서실 차장, 문도 총무국장 등 3명을 7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나와달라는 출석통보를 받았다"며 "문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흠집내기인데다 일정과 당무도 바빠 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이 당선자가 비례대표 2번 순위를 배정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잡고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1항 또는 2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부와 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그러나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할 만큼 준비가 돼 있고 이 당선자가 2번 순위를 배정받는 데 문 대표가 관련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YCHE CHAIR

자신의 환경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 상담업체 - 유진네트웍스

Expanding culture and values into leading your lifestyle.

Enriching the perfect working condition through our firm and unique design.

www.dal-yang-san-gwa.com

달양산과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문의전화 051-383-8263